

2027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

- ◇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도민과 소통하는 「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」을 수립·시행코자 함

I 주민참여예산제 개요

□ 목 적

- 주민이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, 도민 의견을 반영한 체감형 재정운영 실현

□ 추진근거

- 지방재정법 제39조, 동법 시행령 제46조, 전북특별법 107조, 전북 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 제7조

□ 정부 정책방향 : 재정운용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기초

- 주민참여예산 규모 및 대상사업 확대
 - 주민세 총액을 최소 기준으로 권고하고, '30년까지 주민참여예산 규모 단계적 확대
 - 주민제안 공모사업 중심에서 일반 예산사업까지 주민참여 대상 확대
- 예산 쏙 과정에 대한 실질적 주민참여 강화
 - 예산편성 중심의 참여에서 사업 집행·결산·성과평가 등 예산 전 과정으로 참여 확대
 - 주민참여예산기구 연중 운영, 집행 모니터링 및 수시 제안접수 활성화 등 참여방식 다각화
- 주민참여 역량 제고 및 제도 운영체계 고도화
 - 대상별·수준별 교육 강화와 「주민e참여」를 통한 정보공개 확대 등 주민 참여역량 제고
 - 광역-기초·주민자치회 간 연계·협업 강화,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제도 활성화 유도

1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운영

- (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) '26년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한 설명 및 의견수렴과 주민제안사업 심의 등을 통해 예산편성 과정 참여
 -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: '25. 11. 5./ 민간위원 19명 참여
- (실국별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운영) 15개 실국별 '26년도 예산(안)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 및 분야별 주민 의견수렴 실시
 - '25. 9. 29. ~ 10. 31. / 15개 실국,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위원 148명 참여
- (주민제안사업 편성) '26년 주민참여예산 199억원 편성·운영

사업유형	편성액	대상사업
① 지역밀착형	197억원	· 지역전체에 파급효과가 미치거나, 지역주민 다수에게 수혜가 가능한 시·군 추진 사업
② 청년참여형	2억원	·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 지원이 필요한 도 자체 투자 사업

2 주민 의견수렴 및 참여역량 강화

- (도민 의견수렴) 예산편성 방향 및 투자 우선순위 등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 참여
 - 도민 719명 대상/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필요 69.3%, 제도 인지도 30.7%
- (예산학교 운영) 도민감시단 및 시·군 주민참여예산위원 등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실시
 - 53명 참여/ 교육 대상을 시·군 위원까지 확대하여 도·시·군 간 교육 지원 및 협력 기반 강화

3 주민참여예산 확대·개편 논의

- (전북특별법 특례 반영) 도민 참여 공모사업의 추진 및 선정사업의 정책·예산 반영 등을 위한 전북특별법 특례 반영('24. 1. ~)
- (민선 9기 공약 반영) 도민의 정책 제안 및 예산과정 참여 확대를 위한 「도민주도형 프로젝트 공모제」 민선 9기 공약 반영('26. 7. ~)

【주요 개선 내용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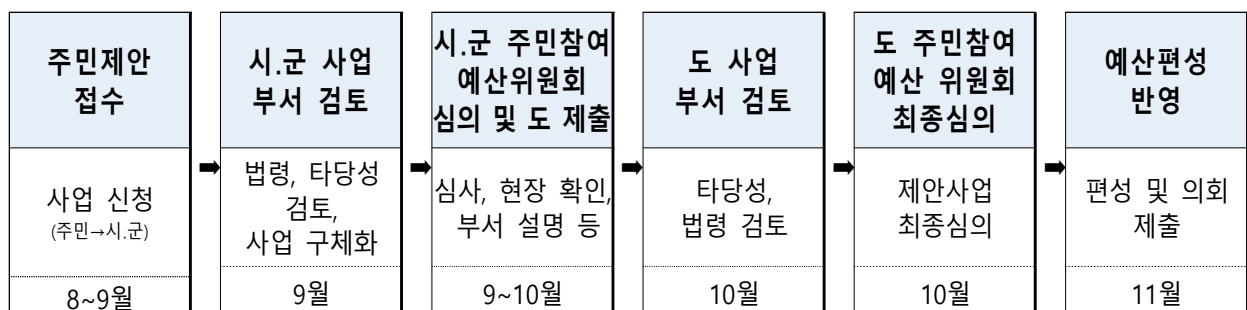
- (공약 연계) 민선 9기 「도민주도형 프로젝트 공모제」와 연계하여 도민의 정책 제안 및 예산참여 확대
- (공모방식 개선) 도민참여형은 연중 상시제안과 하반기 집중공모 병행 운영
- (심사기능 강화) 사전심의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최종심의 등 단계별 심사 체계 강화
- (全流程 참여 확대) 주요사업 민관 공동 현장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환류체계 구축

1 2027년도 주민제안사업 공모(도민주도형 프로젝트 공모제)

※ 세부 공모일정은 공모계획 별도 수립 예정임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

1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(시·군 접수)

- (예산규모) 220억원
- (참여방법) 시·군 홈페이지, 우편, 이메일 등 접수
- (대상사업)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
 - (지역역점사업) 지역전체에 파급효과가 미치거나, 지역주민 다수에게 수혜(주민 공동이용시설)가 가능한 사업
 - (지역의 재난·재해 예방사업) 지역주민 안전과 직접 연관 사업
 - (기능보강사업) 공개경쟁입찰 대상 사업 및 시설비 성격
- 추진절차



○ 부적격 사업

부적격 사업

- ▶ 지방자치법, 지방재정법 등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 위반
 - 광역도 사무가 아닌 경우(국가사무, 민간사무/ 예 : 교육청, 경찰청)
 - 기타 현행 개별법령 위반 내용이 포함된 사업 및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
 -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(행정운영경비)/ 법정, 의무적 경비 및 기준경비
- ▶ 국고보조사업, 국가직접사업, 계속사업 및 기 시행 중인 사업(중복지원 불가)
- ▶ 공공청사(주민센터 등) 기능보강 사업(단, 청사 내 입주한 공공서비스 제공시설은 예외적으로 검토 가능)
- ▶ 이미 설치·운영 중인 시·군 및 민간시설에 대한 운영비·사업비의 신규 또는 증액 요구사업
- ▶ 특정 개인·단체 지원 전제 사업(위탁사업 포함)이나 제품 판매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
- ▶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거나 건별 500만원 미만의 소액사업
 - 소액사업은 시·군 자체 예산으로 추진
- ▶ 이미 시행 중이거나 공연, 축제 행사성(프로그램) 사업
- ▶ 사전절차 미이행 등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
 - 학술용역 심의, 공유재산 심의, 민간위탁 동의 등 법정 사전절차 미이행한 경우
- ▶ 기 지원된 동일 사업 및 기타 사업목적이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등
- ▶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
 - (단,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은 예외적 인정)
- ▶ 사유지에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
 - (단, 농로포장 등의 공익적 기반시설 사업은 지원 가능. 단, 공익성 확보 필요하며 주민동의 반드시 전제)
- ▶ 주민 간 이해관계가 대립되거나 갈등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

② 도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(도 예산과 접수)

○ (예산규모) 17억원

※ 도민참여형·청년참여형은 총 20억원 범위 내에서 유형별 규모 조정 가능

○ (공모방식) 연중 상시제안 + 8 ~ 9월 집중공모 병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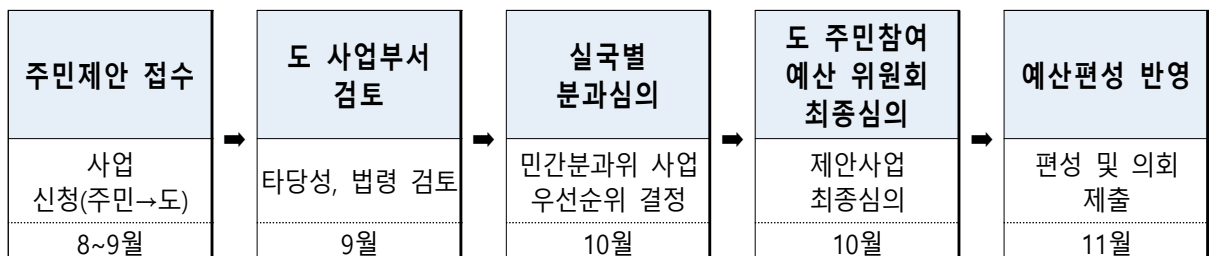
※ 집중공모 기간 이후 접수 건은 '28년도 예산 반영 검토

○ (참여방법) 도 홈페이지, 우편, 이메일 등 접수

○ 대상사업 ※ 부적격 사업은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과 동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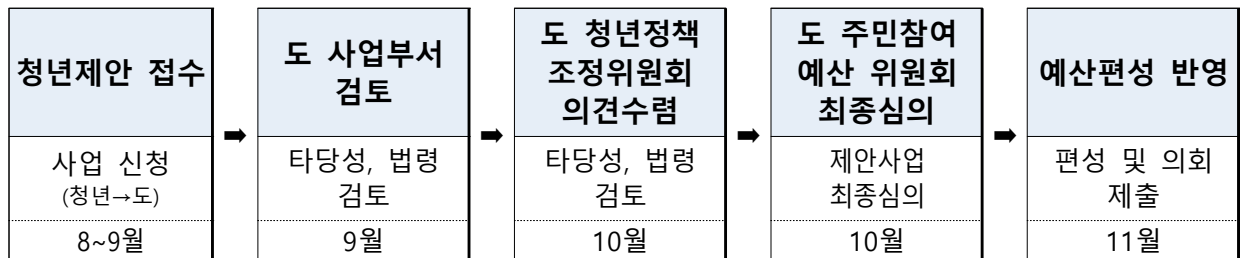
-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사업
- 지역의 공통문제 해결을 위해 도 차원의 추진이 필요한 사업
- 도 전역 또는 다수 도민에게 수혜·파급효과가 미치는 사업

○ 추진절차



3 청년참여형 주민제안사업(도 인구청년정책과 접수)

- (예산규모) 3억원
- (참여방법) 제안사업 신청서 작성 제출(청년참여예산 플랫폼 활용)
- 대상사업 ※ 부적격 사업은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과 동일
 - 청년의 생활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업
 - 청년이 직면한 공통문제 해결을 위해 도 차원의 추진이 필요한 사업
 - 다수 청년에게 수혜·파급효과가 미치는 사업
- 추진절차



2 주민 중심 심사·선정 체계 강화

- (단계별 심사체계) 사업부서 법령·타당성 검토 → 분야별 사전심의 →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최종심의
- (분야별 사전심의) 제안사업의 성격과 분야에 따라 기존 주민참여 기구를 활용하여 사업 필요성·효과성 및 우선순위 등을 사전심의

구 분	사전심의 기구
지역밀착형	시·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
청년참여형	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
도민참여형	실·국 주민참여예산협의회 등 활용

※ 도민참여형은 제안사업의 접수규모 및 분야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사전심의 대상·방식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

- (최종심의)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도민심사단으로 활용하여 사업 부서 검토 및 사전심의 결과 등을 토대로 제안사업 최종심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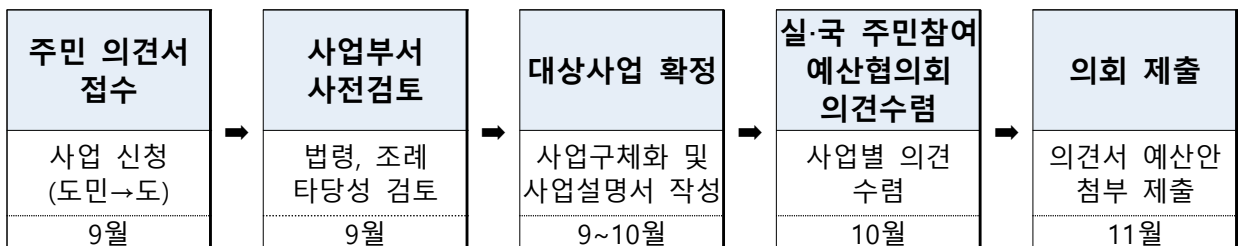
3 예산편성 과정 주민참여

1 도민 여론조사 실시

- (조사기간) 2026. 8월 말 ~ 9월 초
- (조사대상) 만19세 이상 전북도민 700명
- (조사방법) 모바일 웹, 유선전화, 면접조사 병행
- (조사내용) '27년 예산편성 반영 중점 분야·사업 우선순위

2 일반참여예산사업 운영

- (대상사업) 주민제안사업 外 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업
 - 30억원 이상 자체사업 또는 3억 이상 축제·행사성 사업
 - 주민이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한 사업
- (참여방법) 도 홈페이지, 우편, 이메일 등을 통한 주민의견 접수 및 실·국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의견수렴
- 추진절차



3 주민참여기구를 통한 의견수렴

- (운영시기) 2026. 9 ~ 10월
- (운영대상)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실·국 주민참여예산협의회 160여 명(도 30, 실·국 130)
- (주요내용) 주민제안사업 심의 및 실·국별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의견 반영

① 주요사업 주민참여 모니터링

- (대상사업) 주민참여예산사업 중 사업규모, 주민 관심도, 집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요사업 선정
- (점검방식) 담당부서 자체점검을 기본으로 하되, 주요사업은 담당 공무원·주민참여예산위원·민간 등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 현장점검
- (점검내용) 사업 추진상황, 예산 집행현황, 당초 제안취지 반영 여부 및 사업 추진상 문제점 등
- (결과조치)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사업부서에 전달하여 조치 하고 향후 사업 운영에 반영

② 주민참여예산 성과평가 및 환류

- (평가대상) 전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중 평가 대상사업
- (평가방법) 기존 주요재정사업평가·보조사업 성과평가 등과 연계하여 중복평가를 최소화하고 주민 의견 반영
- (평가내용) 사업목표 달성도, 주민 체감도, 예산 집행 적정성 및 지속 추진 필요성 등
- (결과활용)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및 유사 사업 심사 등에 환류

5 주민참여 역량 및 제도 활성화

1 도 및 시·군 예산학교 운영

- (운영기간) 2027년 연중
- (운영주체) 도 및 시·군
- (대 상) 도 및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등
- (주요내용) 지방예산 및 주민참여예산제도, 제안사업 심사·모니터링 등 참여단계별 실무교육
- (운영방향) 도 교육 대상을 시·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까지 확대하고, 시·군 자체교육과 연계하여 도-시·군 간 교육지원 및 협력체계 강화

2 제5기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구성·운영

- (구성시기) 2027. 5월 중
- (위촉기간) 2027. 6. ~ 2029. 5.(2년)
- (구성방법) 공개모집 및 시·군 추천 등을 통해 도민감시단 구성
- (인 원) 50명 내
- (주요기능) 예산낭비신고, 민원처리 적정성 여부 판단,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 및 제도개선 건의 등
- (운영방향) 예산학교 등 역량강화 교육과 연계하여 도민의 자율적인 예산감시 활동 지원

3 주민참여예산 협업·인센티브 지원

- (협업강화) 시·군별 주민참여예산 등 관련 제도와 적극 연계·협업하여 적극 행정 추진
- (인센티브)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대상 표창 실시

※ '20년 1명, '21년 미실시, '22년 2명, '23년 2명, '24년 3명, '25년 1명

IV

향후계획

8월	▶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	▶ 예산 조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범위 및 절차 등
8~9월	▶ 주민제안사업 공모 및 접수	▶ 공모계획 수립·공고 및 주민제안 사업 접수 ▶ 지역밀착형·도민참여형·청년참여형 운영 ※ 도민참여형은 연중 상시제안 병행
연중	▶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	▶ 도 홈페이지, SNS 등 다양한 매체 활용
8~9월	▶ 도민 여론조사 실시 및 결과 공개	▶ '27년 예산편성 중점 투자방향 및 사업 우선순위 등에 대한 의견수렴
9~10월	▶ 실·국별 주민참여예산협의회 개최	▶ 실·국별 주요사업 및 예산편성 방향 등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
10월	▶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	▶ '27년 주민제안사업 최종심의 등
11월	▶ 예산안 제출	▶ 도(예산부서) → 도의회 ▶ 주민의견서 첨부 제출
12월	▶ 예산안 확정	▶ 도의회 예산안 심의 의결
12월	▶ 주민참여예산 반영 결과 공개	▶ 도 홈페이지(전북재정) 등 공고